

2022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(iachoi@kiep.go.kr, Tel: 044-414-1049)

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(jhlee@kiep.go.kr, Tel: 044-414-1134)

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(mgshin@kiep.go.kr, Tel: 044-414-1169)



차 례

1. 머리말
2. 다자 정상회의: 한-아세안, 아세안+3,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
3. 양자 정상 교류: 캄보디아, 필리핀, 태국, 인도네시아
4. 평가 및 시사점

주요 내용

- ▶ 한국정부는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‘한-아세안 정상회의’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을 발표함.
 - 윤석열 대통령은 ‘자유, 평화, 번영’의 3대 비전과 ‘포용, 신뢰, 호혜’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‘인도태평양 전략’을 발표하고, 아세안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임을 표명함.
 -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과 ‘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(AOIP)’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,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 발표를 통해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.
 - 한국은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 이행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할 계획이며, 2024년 한-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-아세안 관계를 ‘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함.
- ▶ 윤석열 대통령은 한-아세안 정상회의 외에도 아세안+3,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, 아세안 3개국(캄보디아·필리핀·태국)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함.
 -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‘한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’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, 디지털, 공급망, 기후변화, 개발협력, 투자와 관련된 정부·민간 MOU 10건을 체결함.
- ▶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가운데,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한국의 아세안 중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.
 -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‘한-아세안 정상회의’에서 최초 공개함으로써,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핵심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.
 -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은 아세안과의 전략·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는데, 이는 한국이 기존의 교역·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.
- ▶ 다만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가 아세안 측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증액 외에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.
 -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정책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정상 및 고위급 대화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,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.

1. 머리말

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~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,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을 발표함.

- 이번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아세안 정상외교 무대로서, 새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.
- 윤 대통령은 한-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해 아세안+3,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한편, 캄보디아, 필리핀, 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음.
-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14~16일 인도네시아 발리(Bali)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참석 계기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‘한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’에 참석하였음.

■ 이에 보고에서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과를 고찰하고,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 평가와 함께 향후 한-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2. 다자 정상회의: 한-아세안, 아세안+3,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

가. 한-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분석

■ 한국은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23차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‘인도태평양 전략’과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(KASI: Korea-ASEAN Solidarity Initiative)’을 발표함.

■ 윤석열 대통령은 ‘자유, 평화, 번영’의 3대 비전과 ‘포용, 신뢰, 호혜’의 3대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,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
- 윤 대통령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로 ‘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’를 명시했으며,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화로운 역내 질서 촉진을 위해 주요국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.¹⁾
- 한국은 인도-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9대 중점 추진 분야로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② 법치·인권 증진 ③ 비확산·대테러 협력 ④ 포괄적 안보협력 ⑤ 경제안보(공급망) ⑥ 첨단기술 협력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⑦ 기후변화·에너지안보 ⑧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 ⑨ 지속가능한 쌍방 교류를 제시함.²⁾

1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2. 11. 11), 「윤 대통령 “자유·평화·번영 3대 비전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”」, <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08196>(검색일: 2022. 12. 1).

-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‘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(AOIP: ASEAN Outlook on the Indo-Pacific)’과 유사성이 높다고 강조하며, 아세안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밝힘.³⁾
 - 아세안은 2019년 6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 대한 아세안 고유의 관점을 담은 AOIP를 공표하였음.
 - AOIP는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, 공동 번영을 위한 4대 협력과제로 ① 해양협력 ② 역내 연계성 강화 ③ SDGs ④ 경제·기타 협력을 제시하였음.⁴⁾

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·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, 한국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도 함께 발표함.

- 윤 대통령은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을 통해 한국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지속·확대할 것임을 밝히며, 2024년 한-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-아세안 관계를 ‘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로 격상할 것을 제안함.
 -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(CSP: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)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, 2021년에는 중국과 호주, 2022년에는 미국과 인도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.
- 한국정부는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의 주요 목표로 △규칙기반 질서 증진 및 역내 평화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△배터리, 전기차, 디지털 등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증진 △기후변화·보건 협력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시함.
 - [안보] △한-아세안 간 전략 공조 확대(외교당국간 전략대화 활성화,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) △해양법 집행역량 강화 및 해양안보 협력 확대 △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 등을 강조함으로써,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한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.
 - [경제]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한-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제안하는 한편, 아세안 내 수요가 높은 전기차,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함.
 - [기후변화·보건] △‘한-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’ 출범 △‘한-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’ 설립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, 백신·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보건협력 확대를 제시함.
- 한국정부는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 이행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-아세안 협력기금, 한-메콩 협력기금, 한-해양동남아(BIMP-EAGA) 협력기금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밝힘.
 - 한-아세안 협력기금은 약 1,600만 달러(2022년 기준)에서 연 3,200만 달러로, 한-메콩 협력기금은 약 500만 달러(2022년 기준)에서 연 1,000만 달러로, 한-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약 300만 달러(2022년 기준)에서 연 600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임.

2) 「尹, 美와 보조 맞춘 한국판 인태전략 선언...‘자유·평화 번영의 인태」(2022. 11. 11), 『뉴스시스』, 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21111_0002083389(검색일: 2022. 12. 1).

3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2. 11. 11), 「윤 대통령 “자유·평화 번영 3대 비전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”」, <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08196>(검색일: 2022. 12. 1).

4) ASEAN Secretariat(2019. 6. 23), “ASEAN Outlook on the Indo-Pacific,” https://asean.org/asean2020/wp-content/uploads/2021/01/ASEAN-Outlook-on-the-Indo-Pacific_FINAL_22062019.pdf(검색일: 2022. 10. 28).

■ 한편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·인적교류·경제·기후변화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제23차 한·아세안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하였음.

- [외교·안보] 아세안 중심성, AOIP 등에 대한 지지, 전통·비전통 안보협력 등은 기존 회의와 유사하나,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, 한-아세안 연대 구상과 같은 신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이 특징임.
- [경제] FTA 추가 자유화, 주요 산업협력 등으로 구성된 기존 경제협력의 틀은 유지하되 전기차,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 협력과 협력기금 증액 등이 추가됨.
- [환경·기후변화] 지난 제22차 정상회의와 가장 차별화된 분야로, 다수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및 관련 기관 설립이 제안됨.

표 1. 제23차 한-아세안 정상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

항목		주요 내용
개회	1~3항	· 개회, 비전 및 한·아세안 특별 동반자 관계 이행 양호
외교안보	4~7항 21~23항	· 아세안 중심성,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(AOIP) 지지 ·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-아세안 연대 구상 제시 ·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(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)로 격상 제안 · 전통 및 비전통 안보협력 · 국방협력 · 국제법 준수 원칙 ·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· 북한 ICBM 규탄 및 담대한 구상 지지
경제	8~13항	· FTA, RCEP 추가 자유화 및 무역 투자 활성화 · 스타트업, 중소기업, 첨단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, 공급망, 인적자원, 과학기술 등 경제협력 · 아세안 연계성(MPAC 2025), 개발격차 해소(IAI), 소지역 협력 · 보건, 코로나19 대응협력, 백신 안보 · 한-아세안 금융협력센터, 산업협력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· 한-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· 인적교류, 교육 및 직업훈련
환경 기후변화	14~16항	· 제1차 재난 대응 장관회의 개최 환영 · 환경협력 프로그램(환경 및 기후변화 대화) · 기후변화 협력 프로그램(탄소대화, 메탄행동,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센터) · 아세안 그린딜(Green Deal) 논의
보건 인적교류	17~19항	· 보건, 코로나19 대응협력, 백신안보 · 노무 및 인적자원개발 협력 · 2023년 ASEAN-Korea Day 채택 · 한-아세안센터의 경제, 사회문화, 상호이해 증진활동
기타	8항 11항	· 제2차 아세안 여성 리더 정상회의 개최 환영 · 제1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, 코로나19 대응협력

자료: 제23차 한·아세안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.

나. 아세안+3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분석

■ 2022년 11월 12일 개최된 제25차 아세안+3(한·중·일) 정상회의에서는 외교, 경제, 보건, 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한 역내 협력 이슈 검토를 바탕으로 다수의 신규 협력안이 채택됨.

- 아세안+3 정상회의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다자 협의체로, 통상 APT(ASEAN Plus Three)로 약칭함.
-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 특성상 외교·안보보다는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안이 구성되며, 2022년 정상회의에서 5년 단위 협력 방향을 제시한 ‘아세안+3 협력 작업계획(APT Cooperation Work Plan) 2023~2027’이 신규 채택됨.

■ 제25차 APT 정상회의의 선언문은 총 45개 항목으로 외교·경제·보건·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안으로 구성됨.

- [외교] 아세안 주도의 역내 협력 프레임워크 및 AOIP 지지, 초국경 범죄 및 비전통 안보협력 등으로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, 이는 동아시아 안보현안에 대한 한·중·일의 입장 차이로 인해 APT의 외교·안보 협력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와 비전통 안보협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에 기인함.
- [경제] 경제협력 의제는 APT 정상회의의 선언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, 이는 외환위기 대응과 역내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APT 정상회의의 태생적인 특성에 기인함.
 - 경제협력 분야에는 전통적인 무역 투자 진흥협력과 더불어 공급망, 디지털 전환, 금융협력, 식량안보, 연계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안이 포함됨.
- [보건협력]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APT 공동 대응 및 보건 장관회의를 통한 보건협력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됨.
- [사회문화] 사회문화 부문은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여성, 복지, 청년, 교육 등 다양한 협력안이 제시되었으며,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음.
- [국제 이슈] 미얀마 정치 상황과 북한의 ICBM 및 핵 개발 관련 이슈가 국제 이슈로 채택되었으며, 특히 북핵 이슈에 대해서 “깊은 우려 grave concern)”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해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함.

표 2. 제25차 아세안+3 정상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

항목		주요 내용
개회	1항	· 제25차 아세안+3 회의 개최
외교안보	2~5항	·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협력 프레임워크 지지 · 신규 아세안+3 협력 작업계획 2023~2027 채택 · 초국경 범죄 및 비전통 안보협력 ·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(AOIP) 지지
경제	8~12항, 13~26항	· 무역투자 진흥 · 필수재화 및 인력 이동 · 동아시아 비즈니스 위원회(EABC) · WTO 규범 준수 및 RCEP 협력 · 식량안보 및 농림업 협력 · Post-Covid 관광협력 · 에너지 협력 · 바이오 순환 녹색경제 모델 · 디지털 전환 ·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 해소 · 4차 산업혁명 · 중소기업, 스타트업 등 취약층 코로나19 피해 지원 · 신산업,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시티 · 지재권 협력 · 금융협력(CMIM, ABMI) · 한·중·일 3국 아세안센터 역할 · 아세안 연계성 협력(MPAC 2025), 13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엄 개최
보건 협력	6~7항, 13항, 28~31항	·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보건협력 · 코로나19 대응 WHO 역할 · APT 보건협력 · APT 보건장관회의 및 보건 이니셔티브 · 2020년 코로나19 대응 보건장관회의 · 재난 후 정신과 지원
사회문화	27항, 32~43항	· 인적교류, 상호이해 증진 · 지속가능개발목표(SDG: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 협력 · 사회복지증진 협력 · 성평등, 여성 인권 ·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· 청년교류 · 공공협력, 거버넌스 · 노무, 직업훈련 · 재난 및 긴급 대응 · 과학, 기술, 혁신, 에너지 · 1.5 채널 및 싱크탱크 협력
국제 이슈	44~45항	· 미얀마 정치 상황, 북한 IBCM 및 핵실험

자료: 제25차 아세안+3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다.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요 내용 분석

■ 2022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안보, 보건,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협력 방향을 공유함.

- EAS에는 아세안 10개국과 8개 대화 상대국(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러시아)을 포함해 총 18개국이 참여하나, 미얀마는 이번 회의에 불참함.
- 윤석열 대통령은 EAS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'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'을 추구한다고 밝히며, 역내 자유·인권·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대한 강조와 함께 '힘에 의한 현상 변경'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힘.

■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은 총 53개 장으로 구성되며, 18개국 협력체의 특성상 아세안 주도의 역내 협력, 환경, 보건, 국제 이슈 등의 보편적 협력과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.

- [외교·안보] 여타 아세안이 주도하는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중심성과 AOIP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, 역내외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외교안보 공동체로서의 EAS 역할을 강조하고, 신규 행동계획(Plan of Action)인 'EAS Plan of Action 2023-2027'을 채택함.
- [환경·에너지] 파리기후변화 협약, 적응·감축 협력, EAS 에너지장관회의 및 에너지 협력 T/F 등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 협력안이 주를 이룸.
- [교육] EAS 교육장관회의를 통한 협력과 ICT, 기술직업교육훈련(TVET) 등에 대한 지원에 합의함.
- [금융] 대외충격에 대응한 거시경제 안정 및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.
- [보건·전염병] 코로나19 팬데믹 공동 대응, 아세안 Post-2015 보건개발 어젠다 2021~2025 및 ACRF 지원협력 등을 논의함.
- [재난관리] 기후변화 대응, 재난 리스크 저감을 위해 EAS/非EAS 국가들의 공동협력을 강조함.
- [아세안 연계성] MPAC 2025 지원, 고품질 인프라, 스마트시티, 메콩협력 지원 등을 강조함.
- [경제협력 및 무역] 다수 국가의 참여로 구체적인 협력안보다는 WTO 체제 준수, RCEP 이행 등 다소 원론적인 협력안으로 구성됨.
- [식량안보] 기존 아세안 중심의 식량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한편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것이 특징임.
- [해양협력] 국제법 준수, 아세안 주도 해양·국방 협력 이니셔티브 지지, 해양환경 보호협력 등이 언급됨.
- [국제 이슈]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회의의 특성상 한반도, 남중국해, 양안 관계, 미얀마, 아세안 중심성 지지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등 다양한 국제 이슈가 채택됨.
 - [한반도 평화] EAS 국가들이 북한 ICBM에 대해 '심대한 우려 grave concern'를 표명했다는 점은 APT 정상회의와 동일하나, 다수의 국제 이슈 중 한반도 이슈를 첫 번째 세부 항목으로 채택한 점은 EAS 회원국들이 한반도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함.⁵⁾

5) 2021년 16차 EAS에서는 미얀마 이슈가 첫 번째로 채택되었음.

- [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] 러시아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 선에서 침공 규탄 및 전쟁 중지 요구를 언급했으나, 일부 EAS 회원국이 전쟁의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선언문에 포함한 만큼 EAS 회원국간의 이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.

표 3.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선언문 주요 내용

항목		주요 내용
개회	1항	· 제25차 아세안+3 회의 개최
외교안보	2~5항	· 역내 대표 외교안보 공동체로서의 EAS 역할 강화 · 아세안 주도 협력 지지, 아세안 중심성, AOIP 지지, 규칙 기반 질서 준수 ·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EAS 협력 강조 · EAS 대사급/고위급 회의 등 EAS Work Process 강화
협력체계	6항	· EAS 행동계획 2023~2027 신규 채택
환경 에너지	7~14항	· 지속가능 도시 세미나 · 기후변화 협력, 파리협약 목표 달성 노력 · EAS 에너지장관회의 · 신재생에너지, 전력 통합망, 아세안 에너지 협력 행동계획 2021~2025 · 기후변화 대응 적응(adaption) 및 감축(mitigation) 협력 · EAS 지속가능 회복 협력을 통한 ACRF 지원 · EAS 에너지 협력 T/F, 대체에너지, 수소, 탄소포집활용저항(CCUS) · 에너지 시스템 연구
교육	15항	· EAS 교육장관회의, TVET, ICT 교육 등
금융	16~17항	· 경제 회복 및 대외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협력 · 거시경제 안정성, 인플레이션 대응, 비공식 EAS 금융장관회의
글로벌 보건 전염병	18~23항	· 코로나19 및 전염병 대응 협력, COVAX · 재난 후 정신과 보건협력 · 공공보건 비상 대응 이니셔티브 · 아세안 보건장관회의, 아세안 Post-2015 보건개발 어젠다 2021~2025 · ACRF 진전을 위한 공동협력
재난관리	24~25항	· 기후변화 대응, 재난 리스크 저감 이니셔티브 · EAS/非EAS 국가 재난 대응협력
아세안 연계성	26~27항	·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(MPAC) 2025 지원 · 고품질 인프라, 스마트시티, 메콩협력 지원
경제협력 무역	28~33항	· 상품/용역 이동 활성화 ·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활성화, WTO 준수, RCEP 이행 · 10차 EAS 경제장관회의 ·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원(ERIA) 연구활동 · Post-Pandemic 회복 노력
식량안보	34~35항	· 아세안 식량안보 이니셔티브 지지, 러-우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우려 · EAS Track II 형태의 식량안보 스터디그룹
해양협력	36~38항	· 국제법 준수, 아세안 주도의 해양안보 이니셔티브 지지 · 해양 환경보호 협력
기타	39~42항	· ICT, 사이버안보 · 전통/비전통 안보협력 · Post-Covid 관광산업 회복 ·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

항목		주요 내용
국제 이슈	한반도	43항 · 북한 ICBM, 유엔안보리 결의안(UNSCRs) 준수 요구
	남중국해	44~45항 · 항행의 자유 준수,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 환영 · 매립, 임의 사용 등 안정 훼손활동 우려, 평화적인 분쟁해소 방안 추구
	양안 관계	46항 ·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, 양안 관계 이슈 평화적 해소
	미얀마	47항 · 미얀마 정치 상황 우려, 아세안 특사 파견 지지
	극단주의 테러리즘	48항 · 테러리즘, 극단적 폭력 대응협력
	역내 역할	49~50항 · 아세안 공동체 및 중심성, TAC, Bali Principle 등 안보협력 지지 · AOIP 지지
우크라이나	51항 · [러시아의]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, 핵무기 반대, 국제법 준수, 전쟁 중지 · [일부 EAS 국가] 전쟁 원인 규명 필요 주장	
기타	51~53항 · 여성, 에너지, 지속가능개발 · 18차 EAS 회의는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	

자료: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 선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3. 양자 정상 교류: 캄보디아, 필리핀, 태국, 인도네시아

가. 캄보디아

■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훈 센(Hun Sen)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, 한-아세안 협력,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.⁶⁾

- 한국은 '아세안 중심성'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토대로 한-아세안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으며, 훈 센 총리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방향에 대한 환영 의사를 전달함.
-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캄보디아에 협조를 당부했으며, 훈 센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지원과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응답함.

■ 양국 정상은 2022년 한-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·발전시키기로 함.

- 한국은 캄보디아와 1970년 5월에 수교했으나, 1975년 4월 크메르 루즈의 집권으로 단교했다가 1997년 10월에 외교관계를 공식 재개함.⁷⁾
- 훈 센 총리는 캄보디아 남부 칸달주에 건설될 '한-캄보디아 우정의 다리'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으며,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함.
 - '한-캄보디아 우정의 다리' 사업은 2020년 2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-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센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, 한국의 지원으로 2023년 착공 예정임.

6) 대한민국 대통령실 브리핑(2022. 11. 11), 「한-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」.

7) 관계부처 합동(2019. 12), 「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」.

- 양국 정상은 한-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, 2022년 12월 1일에 발효된 양자 FTA를 계기로 양국간 무역·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함.
 - 한-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21년 1월 말에 정식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를 완료함.⁸⁾
 - 한-캄보디아 FTA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단기(7개월)에 전 과정 비대면 협상을 거쳐 2021년 2월에 최종 타결되었으며, 2022년 12월 1일 공식 발효됨.
 - 한-캄보디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·기계·딸기 등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한국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⁹⁾

나. 필리핀

■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12일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(Ferdinand Romualdez Marcos, Jr.)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.¹⁰⁾

- 양국 정상은 협력 강화방안, 한반도 문제, 한-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.

■ 양국 정상은 원전, 녹색기술, 인프라, 국방·방산, 해양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.

-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자국의 바탄(Bataan) 원자력발전소 재개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며, 기후변화를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녹색기술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힘.
 - 필리핀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2020년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에 따라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신임 마르코스 정부는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.¹¹⁾
 - 필리핀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기술력으로 바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으나, 1986년 피플파워 민주화 운동으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전소가 가동된 바 없음.
-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인프라 확충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함.
- 필리핀은 전투기·군용차·장갑차·호위함 등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이며, 2013~27년 '군(軍) 현대화 계획(The Revised AFP Modernization Program(RAFPMP), RA 10349)'이 추진됨에 따라 양국간 국방·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.
 - 필리핀은 남부 지역 공산 반군 문제,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대내외 긴장 지속, 테러·마약 등 범죄 성행, 방위장비 노후화·부족 등을 이유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해양안보는 양국간 협력이 활발한 분야로, 한국은 2022년 9월에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필리핀과 해양 분야에 특화된 협의체인 '한-필리핀 해양대화(ROK-Philippines Maritime Dialogue)'를 출범시킨 바 있음.¹²⁾

8)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(2021. 1. 29), 「한-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」.

9)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1. 2. 2), 「한-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(FTA) “최종 타결”」.

10) 대한민국 대통령실 브리핑(2022. 11. 12), 「한-필리핀 정상회담 결과」.

11) Shiga Yuichi(2022. 4. 17), “Marcos vows to bring nuclear power to the Philippines,” *Nikkei Asian Review*.

- 출범식에서 양국은 △ 해양영역 인식(Maritime Domain Awareness) △ 해양환경 보호 △ 해양경제 (어업, 해운 등) △ 지역·다자 차원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, 2023년에 '제2차 해양대화'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.

■ 한국은 '한-아세안 연대 구상'을 바탕으로 정치, 경제,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고, 마르코스 대통령도 이를 환영했으며,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.

다. 태국

■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일 프라윗 찬오차(Prayut Chan-o-cha)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, 양국 협력 강화방안과 한반도 문제 및 역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.¹²⁾

-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태국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으며, 프라윗 총리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.
- 양국은 이번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한 '한-아세안 연대 구상'을 바탕으로 한-아세안 관계 발전에 기여해나가기로 함.

■ 양국 정상은 2022년 '한-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'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양국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'2022~2027년 한-태국 공동행동계획'을 채택했고, 공급망, 인프라 등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.

- 행동계획은 정치·안보, 녹색경제, 미래산업·교역, 보건, 지속가능한 발전, 인적 교류의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계획을 담고 있음.
- 윤 대통령은 태국 측에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 등의 협의체를 통해 협력하고, 태국 내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.
 - '아세안의 디트로이트'라고 불리는 태국은 1960~7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기업의 집중적인 투자로 자동차산업이 발전했으며, 태국정부가 2021년 5월에 전기차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'국가 전기차 로드맵(National EV roadmap)'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.
 - 태국의 '국가 전기차 로드맵'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전기자동차 생산 비중을 30%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,¹⁴⁾ 기존 태국 자동차시장을 장악한 일본 자동차기업 외에 Great Wall, Hozon, BYD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·판매를 위한 대태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.¹⁵⁾

12) 외교부 보도자료(2022. 9. 21), 「한-필리핀 해양대화 출범(9.21.): 동남아 국가와 최초 해양 분야 전문 특화 협의체 구축」.

13) 대한민국 대통령실 브리핑(2022. 11. 11), 「한-태국 정상회담 결과」.

14) Lim, Anthony(2021. 5. 18), "Thailand reveals its EV roadmap - three-phase plan into 2030, 30% of local production to be EVs by then," *Paultan*.

15) Xu, Selina and Patpicha Tanakasempipat(2022. 11. 2), "China's Electric Carmakers Eye Thailand in Next Sales Push," *Bloomberg*.

라. 인도네시아

-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1월 14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‘한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’을 개최함.¹⁶⁾
 -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(KADIN)가 주최한 위 행사에는 양국 정상, 유관부처 장관,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함.
 - 위 행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-아세안 관계를 ‘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이후 아세안 국가와 개최하는 첫 경제인(經濟人)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
- 이번 행사에서 양국은 디지털, 공급망, 기후변화, 개발협력, 투자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, 이와 관련된 정부·민간 MOU 10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.
 - 양국간 체결된 디지털, 공급망, 기후변화, 개발협력 등 분야의 MOU는 윤 대통령이 이번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‘인도태평양 전략’ 후속조치의 일환임.
 - [디지털]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자 한류 콘텐츠 최대 소비국인 점 등을 고려해 양국은 ‘한-인니 경제협력 MOU’ 개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,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‘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’를 체결해 신수도 이전 관련 디지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함.
 - [공급망] 양국은 △공급망 △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교류 △중소기업 정책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‘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’와 △광물 공동탐사 △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을 포함하는 ‘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’를 체결함.
 - [기후변화] 한국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‘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’을 채택함.
 - [개발협력] 양국은 △자카르타 중전철(MRT) △신수도 이전 관련 미래항공모빌리티(AAM: Advanced Air Mobility) △스마트 항만을 포함한 해양교통 인프라, 해양 교통안전 등 해양 교통 관련 MOU를 체결함.
 - [투자협력] 한국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, 투자 프로젝트 ‘패스트 트랙’ 채널로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‘한-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’를 체결함.
 - 한편 ‘한-인니 경제인 간담회’에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계 인사가 참여해 전기차, 배터리, 핵심 광물, 디지털, 청정에너지 등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.

16)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(2022. 11. 15), 「G20 정상회의 계기 「한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」 개최.

표 4. 2022년 한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된 MOU 현황(총 10건)

구분	MOU	체결 주체
정부 MOU (6건)	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	한국기획재정부 - 인니해양투자조정부
	한-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	한국산업통상자원부 - 인니경제조정부
	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	한국환경부 - 인니공공사업주택부
	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협력 MOU	한국국토교통부 - 인니교통부·자카르타주
	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	한국중소벤처기업부 - 인니중기부
	해양교통 협력 MOU	한국해양수산부 - 인니교통부
기업 MOU (4건)	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 MOU	한국현대차 - 인니신수도청
	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 MOU	한국현대차 - 인니교통부
	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	한국LG CNS - 인니신수도청
	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	한국광해광업공단 - 인니니켈 협회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(2022. 11. 15), 「G20 정상회의의 계기 「한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」 개최」, p. 2.

4. 평가 및 시사점

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가운데,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
-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한미동맹 중심 외교를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나, 윤 대통령은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이라는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을 제시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음.
- 무엇보다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‘한-아세안 정상회의’에서 최초 공개함으로써,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핵심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.
- 아울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과 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,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세안 측의 우려 또한 해소하였음.
 - 일부 아세안 측 외교·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배타적 협력을 추구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, 포용적 협력을 지향하는 AOIP의 내용을 담기를 희망하였음.¹⁷⁾

■ 한국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에서는 아세안과의 전략·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가 강조되었는데, 이는 한국이 기존의 교역·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.

- 전임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이 한-아세안 간 양자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 경제·외교 다변화 모색에 중점을

17)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(CSIS) Shafiah F. Muhibat 연구실장 인터뷰(2022. 10. 11);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(BRIN) 국제정치·외교정책부 Dewi Fortuna Anwar 교수 인터뷰(2022. 10. 13).

두었다면,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은 ‘규칙 기반의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강화’를 목표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성격을 가진다.¹⁸⁾

- 윤 대통령은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에 대한 설명에서 규칙 기반 질서 증진을 위한 아세안과의 전략 공조와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한편, 아세안과의 ‘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 격상을 공식 제안하였음.
-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교역·투자 증대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전기차, 배터리 등 한-아세안 간 수요가 높은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함.
 - 특히 한-인도네시아 간 맺은 ‘핵심광물 공급망 MOU’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전기차,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(니켈)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전략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한국이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을 통해 대아세안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,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증액 외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.
 - 전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인도를 특정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던 반면,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은 아세안을 겨냥한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정책동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함.
 - 정상외교를 비롯한 외교·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대상국 중에서도 아세안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,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.
 -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10개국 협의체인 아세안을 넘어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한 만큼, 대통령 순방을 통해 아직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회원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.
 - 배터리, 전기차 등 특정 산업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특정국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, 10개국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국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
 - 이번 ‘한-아세안 연대 구상’에서는 인적 및 사회·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는데, 양측 국민 간에 상호 신뢰 없이는 지속가능한 협력을 보장할 수 없는바, 한-아세안 국민간의 상호 인식 제고를 위한 인적·사회문화 협력 확대방안도 함께 이행되어야 함.
 -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-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교류를 증진하는 한편, 아세안의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함.
 - 아울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시 AOIP 의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,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.
 - 2023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맞아 현재 선언문 성격에 머물러 있는 AOIP의 제도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¹⁹⁾ 한국의 AOIP 이행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.

18) 최원기(2022), 「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: 주요내용과 전략적 함의」, IFANS FOCUS, No. 14, p. 2.

19)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(CSIS) 국제관계부 Andrew Wignuna Mantong 연구원 인터뷰(2022. 10. 13).

- 이번 아세안 관련 다자·양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협력 안건과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'인도태평양 전략'의 주요 이행과제를 고려할 때, △FTA를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 △공급망 △첨단기술 △개발협력 △기후변화 등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[RCEP 및 양자 FTA] 양자 FTA 및 RCEP의 신속한 발효와 이행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며, 특히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-캄보디아 FTA(2022.12.1. 발효), 한-인도네시아 CEPA(2023.1.1. 발효 예정), RCEP(일부 국가 미발효)의 활용방안을 홍보·지원하는 것은 물론, 상대국과의 원산지 규정 인정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함.
 - [공급망] 최근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한국의 2대 교역·투자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-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요소 공급 MOU, 핵심광물 MOU 등의 사례를 준용해 여타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
 - [첨단기술] 첨단산업, 4차 산업혁명, 디지털 전환, 에너지 등 주요 산업협력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별 수요에 따라 보다 구체화된 의제 발굴과 이행이 요구되며,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 외에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- [개발협력] 한·아세안 협력기금(AKCF), 한·메콩협력기금(MKCF) 등 다자협력 재원 2배 증액을 고려해 한아세안협력사업팀(AKPMT)과 같은 이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, 사업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.
 - 연계사업은 댐-도수로-정수장, 발전-변전-송배전 등의 형태로 상하류 가치사슬을 구성하거나 관련 사업을 상호 매칭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함.²⁰⁾
 - [기후변화] 아세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역량 부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국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산림협력, 스마트그리드(Smart Grid), 탄소포집이용저장(CCUS: Carbon Capture, Utilization and Storage)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안을 논의·추진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

20) 주요 성공사례로는 인도네시아의 '까리안-세르퐁 광역상수도 사업'이 있음.